



화물연대
파업 종료
2~3면

중국 '백지 시위' 6면
재한 중국 유학생이
말하는 중국 시위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반(反)중국 동맹
구축하려 애쓰는 미국
5면

윤석열
억압 정치
4면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통찰
8~10면

왜
혁명적 당이
필요한가?
14~15면



이태원 참사 11, 16면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관련 기사 2~4, 8~10면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박설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심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는 노동자들은 원통한 심정을 토로했고, 일부는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파업 종료를 보도하면서 “조합원 61.8퍼센트의 찬성”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보수 언론의 경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동자들이 “백기 투항”했다고 썼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13.67퍼센트밖에 안 됐다. 투쟁에 나섰던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항복하지는 투표를 해서 뭐 하나”면서 말이다. 그 와중에도 적지 않은 수(37.6퍼센트)가 반대표를 찍었다.

즉, 기층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파업 종료 결정을 뒤엎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기꺼이 동조한 것도 아니다. 되레 다수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모진 탄압에도 16일간 용기 있게 싸운 화물 노동자들. 12월 6일 의왕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생계비 위기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조속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실질임금이 깎이고 은행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개월간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일부는 거센 저항에 나섰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광주·전남 건설 전기 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그랬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도 심각한 생존 위기 상황 때문이었다. 하루 평균 14~16시간 장시간 운전대를 잡아도 치솟은 기름값과 부품 비용, 눈덩이처럼 커지는 은행 이자 부담 등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시행(유지·확대)을 바랐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심각한 생활고에 처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대표했다.

반면 윤석열은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

기로 더욱 광범한 대중의 불만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를 낸다면 반윤석열 운동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내건 투쟁일지라도, 정부의 수반인 윤석열이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정부와 사용자들이 모두 달려들 만큼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일부 산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걱정을 키웠다. 산업 전반에서 이윤에 타격을 받을 듯하자 첨예한 정치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번 투쟁은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싸울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광범한 지지·응원이 뜻하는 바다.

윤석열 퇴진운동은 12월 3일 촛불 집회를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로 열었다. 정치적 운동이 처음으로 대중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적극 결합시켰다. 이것은 약소하지만 분명 전진이다.

윤석열의 범정부적 탄압 공세

윤석열은 집권 초인 지난 6월에도 화물 노동자들의 강렬한 파업에 직면했다. 노동자들은 일부 산업에 차질을 주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구실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파업 초기부터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동하고, “국가적 재난,” “북핵 위협” 운운하면서 국가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며 환호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광일은 지배계급의 증오심을 표현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협상하지 않는다. 국가는 공권력의 삼엄함을 드러내는 심판자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심화하는 경제·안보 위기 등 다중 위기 상황에서 그 고통을 대중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이다. 그래서 노동자 저항을 짓밟고 권위주의적이고 강경하게 탄압했다.

이번 투쟁은 현 정세하에서 세력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였다. 화물연대 파업은(그 합의상) 단지 그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불황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방어 문제에 국가 권력이 나서 통제하고, 사용자들도 웬만해선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의 삶과 조건을 지키려면 투쟁이 보편화(확산)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적 공급망의 교란, 기후 위기 등 체제의 다중적 위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흔히 ‘정치’ 하면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활동, 그들과 협조해서 하는 입법운동 등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의미에서 정치는 이런 의미의 (개혁주의) 정치와 다르다. 대중 투쟁을 조직해 국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실질적인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투쟁에 찬물 끼얹은 민주당 이들에게 의존해 노동자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다

사실상 백기투항 강요한 민주당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12월 8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여당의 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민주당도 애초부터 잘 알고 있었다.

안전운임은 현재 전체 화물 차량의 6퍼센트가량(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 화물 노동자들은 그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품목 확대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구다.

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직후에 자신들이 안전운임제를 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당시 발의한 입법안(올해 말로 돼 있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5개 적용 품목 확대)을 지지했다.

그러나 수개월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관련 안을 점점 후퇴시키더니 결국 정부안을 수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의 말처럼 “민주당은 립서비스만 했을 뿐, 항복을 하라고 반협박”이 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강공에 밀려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벨트 구실을 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으로 후퇴하자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장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며 그조차 거부하겠다고 나왔다.

민주당의 후퇴는 그 정당의 진정한 성격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공공연히 수호하는 정당으로, 기업인들의 지지를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다. 비록 기업인들은 민주당을 차선책으로 여기지만 말이다.

당의 참된 본질 때문에 그들은 이태원 참사 문제에서도, 건축 예산안이나 집시법 개악 문제에서도 타협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에 기대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한다. 개혁과 해방은 다른 누가 선사해 줄 수 없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한계

앞서 살펴봤듯이,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과 국민의힘, 이들의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계급 전쟁으로 대응했다. 그런 만큼 노동운동 측의 대응도 정치적(전 계급적 연대)이어야 했다.

건설노조 일부가 동조 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파업에 나선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일이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는 “화물연대를 지키는 것이 건설노조를 지키는 것”이라며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물론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포함하는 말임), 정의당 등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지도부들의 대응은 그럭저럭 체면치레 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연대를 조직하기는 했지만 매우 부족했다.

가령 민주노총 지도부는 뒤늦게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그것은 12월 6일 하루 조직한 행동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다음날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자기 조합원들이 “윤석열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을 때, 상급단체 지도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대항 ‘명령’을 하며 신속하고 만만찮게 투쟁을 조직하길 회피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철도노조의 “합의 잠정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서울교 통공사나 철도노조가 파업까지 돌입하

지 않았던 것은 좋은 일”이라며 “더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요구가 수용되었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불발은 화물연대 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이 패배하면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강조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동력도 축소될 것이다. 자기패배적 전략의 추구가 아닐 수 없다.

양경수 위원장의 ‘사회적 혼란’ 걱정은 노동조합 지도층의 정치적 무능·무기력을 보여 준다. 중요하게 다룬 기회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사실상 피하면서, 투쟁의 맥을 끊는 구실을 사실상 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부 사이 정치투쟁/경제투쟁 분업 노선의 한계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이런 소심한 실천이 누적돼 온 결과,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연대 행동이 충분히 조직되지 못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당분간 윤석열은 더한층 자신감을 얻고 강경하게 나올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강공을 이어가다가 자칫 실수하면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고,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공격했다가는 만만찮은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석열은 취임 7개월 만에 만만찮은 퇴진 운동에 직면해 있다. 비록 이번에 씹쓸하게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12월 6일 의왕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김문성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이후 어느 정부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7개월 만에 (그것도 일주일 새) 두 번이나 발동했다.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종이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분야인 것만 봐도, 윤석열의 ‘법치’ 운운이 대기업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경찰은 곳곳의 화물연대 거점 농성을 압수수색하고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화물연대 투쟁을 탄압·감시하려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만 321명이나 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에도 나섰다. 노조 때문에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가 난무한다며,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광역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대형 팀을 꾸리고 200일간 단속 전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기업인들과 친기업 언론들은 윤석열의 파업 강경 탄압 기조에 환호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자신들에게 더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통치하는 정부를 선호한다. 그 정부가 저항에 직면해 탄압 기구가 마비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들은 윤석열의 지지율 추락과 반(反)윤석열 정서의 성장에 곤혹스러워했고, 윤석열이 6월 화물연대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하지 않고 양보한 것을 줄곧 타박해 왔다.

친기업 언론들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소폭 상승한 것을 침소봉대하며 화물연대 강경 대응이 성과를 거뒀다고 환호했다.

그들은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을 과장한다. 하지만 화물연대 강경 대응 이후 그들의 자신감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윤석열의 강경 대응이 성공을 거두면 이는 실제로 보수·우파를 결집해 지지율 상승과 정치적 억압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은 강력해서 공세를 펴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필사적인 위기 탈출에 성공해 강한 정부가 되려는 것이다.

물론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는 단호함과 힘을 보여 주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기 쉽다. 이번 주 조사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파업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화물연대 요구안 지지가 정부 안보다 갑절이다. 우리 편에 기회가 없지 않았다.

계급 전쟁,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는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 이윤 보호와 기성 질서 수호, (마약을 빌미로 한) 서민층 통제를 위해 국가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직후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뿐 아니라 “압사”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한 것이 밝혀졌다.

검사들이 참사 사망자 부검 시 마약 검사를 병행하고, 유류품 마약 검사를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사에 대한 항의도 마약을 이유로 억압하려는 수작이다.

윤석열은 범정부적 억압 강화를 위해 여러 억압 기관들에서 내부 숙청을 지속해 왔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100명의 고위 간부가 직위해제 됐는데, 순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였다. 내부 숙청과 동시에 국정원은 고위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민간인 사찰을 다시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시 군경 지휘권을 가지려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더탐사>를 형사 고발했다. 말만 고발이지 한동훈이 검찰 지휘권자이므로 이는 맘에 안 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수사 지시이다. 그리고 언론 일반에 대한 통제 강화인 것이다.



윤석열은 강력해서 공세를 펴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해 강한 정부가 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뒤통수치기

8일 윤석열의 2차 업무개시명령 몇 시간 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품목 확대 없이 3년만 연장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며, 그들이 빈번히 그랬듯이 배신적인 타협을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은 파업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더 강하게 나왔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논리와 기업인들의 단호한 태세에 주눅 들어 꼬리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도 기업인들의 지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에 합의했고, 건축 예산에도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화물연대 투쟁의 압력을 정부와 국회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그 반대 구실을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항의도 정권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두 운동 모두에 민주당은 휘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 불안정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는 데에 기성체제의 일부로서 민주당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신들의 대표를 겨누는 탄압을 가해 오는데도 그저 좌고

우면하며 우물쭈물할 뿐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를 저지할 힘은 집권을 향한 민주당과의 동행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정당이 윤석열 퇴진을 내건 급진적 운동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은 상상력이나 피해의식의 소산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등 노동계 지도부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해서 윤석열의 개악 시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임기초 윤석열의 지지율 추락도 이들이 윤석열의 도발 가능성을 간과하게 한 요인인 듯하다.

그래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반(反)윤석열 투쟁을 만만찮게 조직하지 않고, 대신 민주당과 공조해 “노란봉투법”(파업에 대한 손해소를 금지하려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려는 입법안) 등 개혁입법 성취하기를 하반기 목표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범위 확대 요구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기로 했었다.

개혁 입법 공조야 사안별로는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국정조사 합의, 안전운임제 항복 등 연이은 민주당의 뒤통수치기에 개혁주의자들 측의 어떤 비판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독자적 행동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다.

▶ 5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에 맞선 동맹을 구축하려 인간힘 쓰는 미국

지난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푸틴과 대화할 태세가 돼 있다. 푸틴이 전쟁을 끝낼 방도를 찾는 데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들의 말과 본뜻이 사뭇 다른 전형적 사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통치자들 중 어느 쪽도 이 시점에 협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인다는 징후는 없다. 양측은 모두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협상할 때가 되면(그럴 때가 오긴 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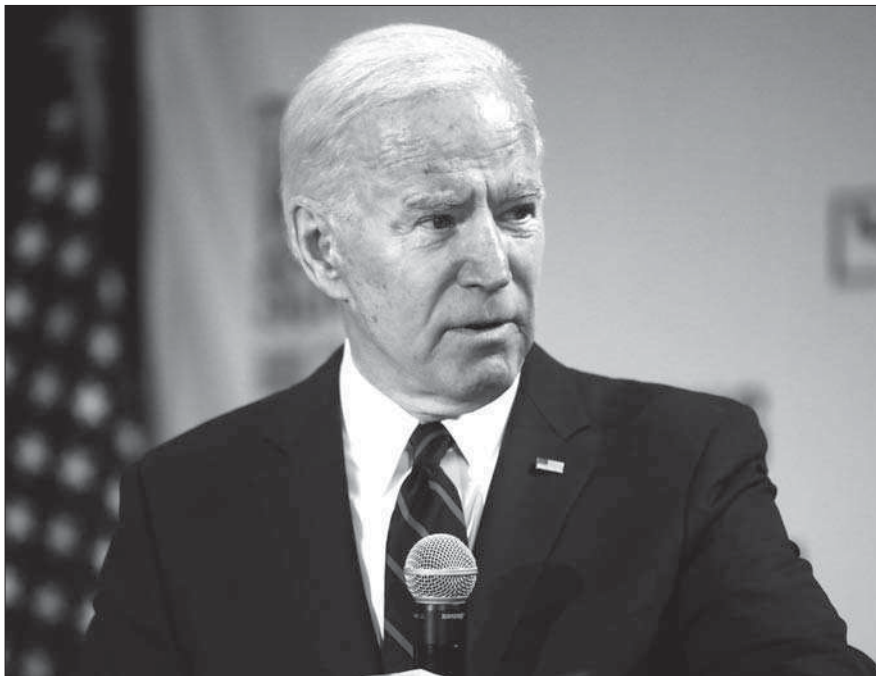
바이든이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 한다. 바이든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유럽연합의 양대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발트해 연안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말함 — 역재만 큼이 전쟁에 열광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와 독일은 분명 반(反)러시아 동맹의 일부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전쟁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전쟁이 끝나면 “유럽의 평화와 안보 질서의 기반이 된 … 합의들”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미국이 중화기를 쏟아붓고 병력을 맹렬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유럽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몇 달 전 분명하게 밝힌 바다.

미국에게 진정한 위협은 중국이다.



대중(對中) 동맹 구축하려 대(對)러시아 전쟁을 이용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

당면한 위협

바이든 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이한 도전을 제기한다. 러시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에 당면 위협을 제기한다. … 러시아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그런 사례다.

“반면 중국은 유일하게 국제 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갖춰 가고 있는 경쟁자다.”

바이든은 자신이 당장 핵전쟁을 전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푸틴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독일·프랑스를 안심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서 유럽을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에 동참시키려 한다.

미국이 이 전략을 위해 선택한 도구는 나토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에드워드 루스는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마크롱이 나토를 “뇌사 상태”라고 비난했

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제 나토는 미국이 지도하는 동원의 최전선이다. “나토는 냉전에 대응해 창조됐다. 그리고 이제는 신냉전에 대응해 재창조되고 있다.

“미국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는 일부 성공을 거뒀다. 여기에 깔린,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식의 논리는 매우 뚜렷하다. ‘우리가 러시아 문제에서 너희를 도울 테니, 너희는 중국 문제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다. … 프랑스·영국·네덜란드 같은 나토의 주요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같은 비(非)나토 동맹국들은 갈수록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 되고 있다.”

지난주 나토의 최고 결정 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 회의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럽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그러나 중국이 자기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다뤘다.

지난 8월, 당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상당히 도발적인 대만 방문 이래 미 군부의 일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왔다. 그동안 이 잠재된 충돌의 현장에 더 가까이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 역주] 동맹국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서방 싱크탱크 ‘삼극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그룹 회의를 보도한 <닛케이 아시아>는 이렇게 평했다. “이 회의가 보여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미·중 갈등 심화 때문에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은 미국이 문제라고 본다. … 미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려 애쓰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주된 근심거리다.”

다시 말해,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의 대대적인 노력이 미국의 동맹들을 결속시키기보다는 소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4호 / 번역 김준호

▶ 4면에서 이어짐

보수성과 소심함

윤석열이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적인 총파업 명령으로 맞불을 놓지도, 윤석열 퇴진으로 입장을 선화하지도 않았다.

특히, 철도노조 집행부는 배신적 합의를 하며 예정된 파업을 취소했다. 만일 철도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이 무력화됐다면, 윤석열에 대

한 가장 효과적인 연대이자 반격이 됐을 것이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소심해진 노동조합 지도층은 자신들의 파업이 발휘할 경제적·정치적 파급력을 더 두려워했다.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정의당은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 폭거”

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런 비판에 상응할 헌법적 탄핵조치 입에 담지 않았다.

정의당 등 개혁주의 정당들도 노동자 대중 파업이나 정부 지도자 퇴진 같은 첨예한 정치 투쟁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 불안정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조직의 불안정화 때문이든 국가 탄압 때문이든 각종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구조들(조직·권리·특표의 성장, 다양한 사회적 대화

구조 등)의 안정성을 해칠 일은 피하고 싶어 한다.

국회 안에서의 입법 공조나 협상을 중시하는 노선도 이런 보수성과 소심함의 발로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투쟁의 쓰라린 경험은, 대담하게 노동계급이 가진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기업인들의 성화를 등에 업고 탄압을 수단으로 계급 전쟁을 선포한 우파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중국 ‘백지 시위’, 시진핑을 한 발 물러서게 하다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12월 7일 장쩌민의 장례식이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중국 지배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1989년 톈안먼 항쟁이 그해 4월 15일 개혁파 지도자인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쩌민은 톈안먼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당사자들이 뽑은 총리였고,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부자가 된 기업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들은 장쩌민을 추모하며 3분간 묵념하자는 시진핑의 제안을 공공연히 무시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3연임을 시작하는 시진핑을 한 발 물러서게 했다. 우루무치에서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에 제때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해 생긴 사상자들을 추모하는 백지 시위도 한몫했다. 12월 7일 중국 방역 당국은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최소화하고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백지 시위를 포함해 제로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1989년 톈안먼 항쟁의 전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졌고, 시위의 양상이 격렬할 뿐 아니라 공산당 비판과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백지 시위와 부분적 양보

시진핑이 서둘러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억압적 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 주요 도시에서는 봉쇄를 풀고 방역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라오닝성의 진저우시는 코로나 감염자가 나타나자 전면 봉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봉쇄를 해제했다.

지난 6일 장쑤성 난징공업대는 감염자가 한 명 나오자 학생들의 이동을 가로막았다. 학교 측의 봉쇄에 항의해 학생들은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한 학생은 “우리를 건드리면 이 학교는 제2의 폭스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정저우시의

백지 시위는 무소불위처럼 보이던 시진핑이 양보하게끔 만들었다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봉쇄에 항의해 집단 탈출한 사건은 시진핑을 물러서게 만든 항의 시위의 도화선 구실을 했다. 지난 4일 밤 후베이성 우한 대에서도 매일 감염자가 수백 명씩 나오자 학생들은 집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대학 50여 곳의 학생들이 백지 시위의 주축이었다. 그래서 시진핑은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조기 방학을 실시해 학생들을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대도시의 시위 장소에 공안들을 배치해 자발적인 시위가 벌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 백지 시위에 관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접근을 차단하는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이 아직도 풀려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0월 13일 베이징 하이톈구 쓰통차오 다리에 “나라의 도적인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펑리파(彭立發) 씨다.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사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웹사이트 <런민원두(人民文讀)>는 펑리

파 씨를 두고 “외부 세력에게 협조한 인민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더 일반적인 탄압의 전주곡이다.

저항의 확산

전국적 저항의 직접적 계기는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이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시진핑 집권 동안 가속된 통제와 착취의 강화가 만들어 낸 숨 막히는 상황 때문이다. 시진핑은 공산당과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은 물론이고, 독립 노조를 결성하거나 농민공 단체를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탄압했고,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의 거침없는 독재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낙담하거나 사기 저하돼 있었다. 2019년 홍콩 항쟁의 패배가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 그런데 이번 백지 시위는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시진핑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노동회보>를 보면, 많은 일터에서 크고 작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또, 환경 파괴나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들도 존재한다. 일련의 시위들은 경찰과 경영진을 양보하게 만들기도 했다. 얼마 전에 벌어진 폭스콘 노동자들의 저항이 그런 사례였다.

아직까지 이런 투쟁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벌어졌다.

이런 저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투쟁들이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특히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연결될 때 중국 지배자들을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계급

시진핑이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지만 그에게 닥칠 더 심각한 난관은 통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방역을 완화할 경우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어 어찌면 2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닥치자 시진핑은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봉쇄 정책으로 일관했었다. 중국의 보건 환경이 열악한 데다 중국산 백신의 효과도 미심쩍었기 때문이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시진핑은 중국이 소강사회*를 달성했다고 선포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국의 방역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노동력인구의 광범함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런 사회 시스템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묘사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레닌이 강조한 대로 노동자 대중이 직접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서방 자본주의와 본질이 다를 바 없는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중국공산당과 정부 관료들이 국유기업을 통제하며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7면에 실린 재한 중국 유학생 인터뷰를 읽으시오.

용어설명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말하는데, 보통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단계를 가리킨다.

재한 중국 유학생 인터뷰

“백지 시위로 중국에 자유와 민주를 향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분출한 가운데 재한 중국 유학생들도 그 저항에 연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중국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 천메이옌 씨(가명)**의 목소리를 전한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겨 준 한수진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전국 각지의 항위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에 견주면 극소수지만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시위의 직접적인 발단은 11월 24일 저녁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市)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현지 정부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는 매우 건성이었고, 반성의 뜻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매우 분노했고, 정부가 가진 공권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중국 현지에서 시위에 참가한 분들도 있나요? 그들이 전하는 시위의 분위기나 상황도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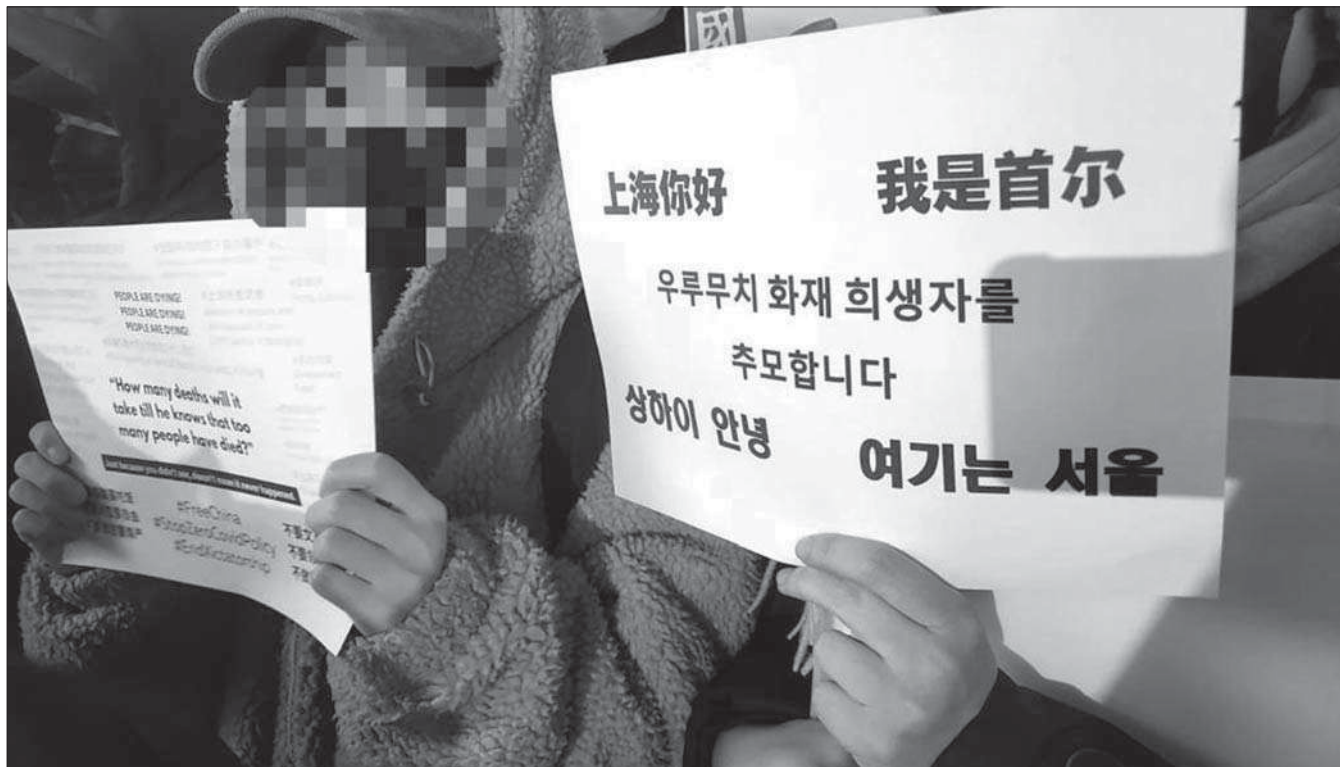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 중에 시위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정보 차단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챗[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모멘트[한국의 '카카오톡 스토리'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에 친구 서너 명이 한 장의 백지를 슬쩍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흰색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나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 갖가지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시안의 한 임산부가 진료를 거부당해 유산했고, 바이올리니스트 천순핑(陈顺平)은 진료를 거부당한 뒤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무리하게 격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이저우성(省)을 순환하는 대형버스가 심야에 전복돼



신장구 우루무치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억눌려 온 대중의 감정이 폭발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시진핑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인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

27명이 사망하고, 허난성 루저우시에 사는 16세 소녀는 [무증상 감염자를 격리하는 임시 시설인] 광창의원(方舱医院)에서 고열이 나는데도 아무도 치료해 주지 않아 불행하게도 사망했어요.

방역 요원들이 격리된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때려 죽이는가 하면,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주민들이 살려고 계단을 내려가며 대피하자 방역 요원이 돌아가라고 막아서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들을 언급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은 모두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2차 재난입니다.

시위에서 시진핑 정부 규탄 구호가 나온 것을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 외에도 전부터 누적된 불만과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신장구 우루무치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지난 3년간 억눌려 온 대중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는 요구에서 차이가 있어요.

불만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만 한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권 공산당 자체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산당이야말로 각종 위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로 코로나 외에 어떤 다른 문제들을 핵심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외에도, 공산당 정부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헌법에는 중국 국민에게 집회·출판·결사·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선거권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국가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도 인민의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중국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검열이 매우 엄격해졌고,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글과 논평이 삭제됐어요.

셋째, 시진핑 정부가 집권 이후 내놓은 각종 정책은 중국 사회의 경제를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예컨대 정부

가 교육 산업과 인터넷 산업을 단속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한마디로, 공산당은 언행이 불일치하고 중국 인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최근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봉쇄를 일부 풀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현지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선전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 봉쇄를 일부 풀 것을] 매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코로나라는 질병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봉쇄를 일부 풀 것에 대해] 정부와 공산당에 감사해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리에 나온 용감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요.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당분간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번 시위로 중국에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연대 활동은 꼭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뷰·정리 이원웅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영상 보기

〈노동자 연대〉신문의 이번 호(제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화물연대 부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뜨겁게 호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측의 화물 파업 지지는 그 운동이 정치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집회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이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은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운동입니다. 겨우 몇 개월 전 대선에서 지배계급을 대변해서 후보로 나와 지금 지배계급의 일상적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자고 하니 말입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개념

그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제목에 있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제 투쟁은 보통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부문의 (임금이나 일자리 등)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말합니다.

정치 투쟁은 실제로 노동계급 일반이 참가하는 투쟁이거나, 아니면 노동계급 일반에 관련된 정부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을 말합니다.

1987년 7~8월 노동자 투쟁은 여러 동시다발적 경제 투쟁들의 연쇄였습니다.

다른 한편, 1996년 연말과 1997년 연초의 민주노총 파업은 노동법 개악안

현재 정의당·진보당 등 주류 좌파 정당들은 이 운동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정의당·진보당은 1년 4개월 뒤 치를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측이 화물연대 파업에 주목하는 것은 옳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정세와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늠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화물 파업 같은 노동자 파업들과 기층에서 연결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과를 철회시키려 했던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경제 투쟁은 부분적인 (또는 부분적인) 투쟁입니다. 반면, 정치 투쟁은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계급 대 계급의 투쟁,” 전면적인 투쟁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은 생계비 위기에 맞선 노동계급 일부의 투쟁이지만, 다른 다양한 노동자 부문들이 동시에 동조 파업을 벌인다면 정치 투쟁이 됩니다.

철도 파업과 지하철 파업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철도 파업이 취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파업 지지 호소하는 화물연대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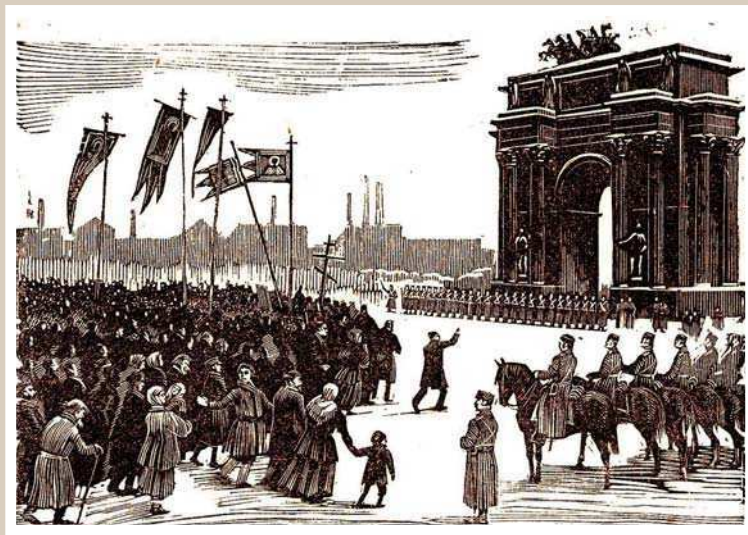


화물연대 파업 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의 비옥한 토양”
“경제 투쟁은 정치 투쟁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
— 로자 룩셈부르크



경제·정치 투쟁의 시너지를 잘 보여준 1905년 러시아 혁명

다.(반면 일부 건설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에 들어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처럼,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투쟁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개입하면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런 투쟁을 정치적인 경제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투쟁의 선봉에 선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서울지하철과 철도 노조는 협상과 교섭으로 무마해 노동자 투쟁의 정치화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사태 발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의 통찰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함께 또는 잇달아 일어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이 점에 관해 20세기 초에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공한 통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906년에 《대중 파업, 정당, 노동조합》이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이 소책자에서 룩셈부르크는 1896~190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고양됐던 파업 투쟁의 물결을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1905년 러시아 혁명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이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 “둘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고, 정치 투쟁은 다시 경제 투쟁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동반 상승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 사이에 만리장성을 세우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1905년 러시아에서 두 투쟁의 연쇄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1월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푸틸로프 금속 대공장에서 노동자 네 명이 해고된 것에 항의해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차르 정부의 경찰이 이 파업을 공격하자 이에 항의하는 정치 파업이 도시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정치 파업은 “계급 감정”을 자극해 노동자들이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싸우고, 다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노동자들을 못 살게 굴던 중간 관리자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 파업이 이번에는 정치 파업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월 22일(그레고리력으로는 1월 9일) 약 20만

명의 파업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같은 민주적 권리, 러·일 전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차르의 집무실로 행진했습니다.

차르의 경호실 부대가 이들에게 발포했습니다. 1000명이 살해당했고 2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피의 일요일’로 불리는 그 학살이 1905년 러시아 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그해 11월경에는 노동자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차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내린 둘째 결론은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를 통해 기존의 보수적 관념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시기에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가 뚜렷합니다. 이를 두고 부문주의라고 부릅니다. 부문주의 때문에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정부나 시스템이나 심지어 공통의 사용자에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갈마들면 상승효과가 일어나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때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 가령 비정규직 차별 같은 문제에 노동자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룩셈부르크의 세 번째 통찰로 이어집니다. 대중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스스로 변하고, 변화 역원을 더욱 키우고, 사회를 재편하기에 적합한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00여 년 전 러시아 노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905년의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1917년에는 노동자 소비에트와 병사 소비에트를 통해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노동계급이 대중 파업을 통해 사회를 재편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



1905년 경험을 발전시킨 1917년 러시아 혁명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분리

룩셈부르크는 혁명적 또는 혁명에 육박하는 준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중 파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에 못 미치지만 거대한 반란의 상황에서도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1987년과 1989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은 언론이나 학술 논문들의 주장과 달리 청년·학생들과 사무직 남성 노동자들(‘백타이 부대’)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노동자들도 개인으로서 또는 소집단을 이뤄 항쟁에 참가했습니다.

마침내 6월 말 군부 독재가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싸울 자신이 생기고 사기가 오른 노동자들은 그 직후부터 자신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경제 투쟁들을 벌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경제 투쟁들은 당시에 주로 파업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 투쟁들은 1989년에는 반정부 투쟁들과 연계되면서 둘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분리는 노동자들이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 경제적 힘을 동원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가령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운동 중에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시너지 효과는 불발했습니다. 9월 하순 시작된 철도 노동자 투쟁이 10월 하순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이어진 건 장차 연결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집회가 12월 초순 전국적으로 2백30만 명이 참가해 정점을 찍고도 수많은 경제 투쟁들의 광범한 분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직접 타깃으로 삼은 위대한 반파배 민주주의 투쟁은 한 층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전화하지 못했고,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자본주의 개혁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시간 제약상 생략하겠습니다.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이 분리되는

▶ 10면으로 이어짐

투쟁이 고양됐던 1987~1989년 한국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 결합



1987년
6월 항쟁

노동자들의
자신감 고무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반정부 투쟁과 경제 투쟁
서로 연계되며 성장

▶ 9면에서 이어짐

것은 노동조합의 개혁주의적 지도층과 개혁주의 정당의 정치인들이 합심해 둘을 분리시키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다시 박근혜 퇴진 운동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2016년 12월 9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철도노조·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민주당의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야합해 철도 파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날 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철도 파업을 끝내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과 심지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탄핵소추를 성사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런 합헌적 절차를 밟아야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반란을 무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강요하기도 하고 고무하기도 하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분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분리는 노동조합의 경제주의와 부문주의를 강화합니다. 이런 파편성이 저항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내리누르는 무거운 납덩이가 돼 왔습니다.

이런 분리를 기층의 활동가들이 받아들이는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생활조건 문제를 갖고 싸우고 정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개혁주의 정당들에 맡기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경 분업은 의회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으로 노동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1년 4개월 뒤 총선에서 윤석열을 패퇴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 심판론은 다가온 기회를 놓치고 노동자들을 유권자로 국한해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배자들은 실제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모두 사용해 저항을 분쇄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고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정부의 파업 탄압을 환영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라고 촉구합니다. 친사용자 언론은 화물연대가 “사회적 약자”를 볼모 삼아 파업한다며 윤석열의 파업 탄압을 정당화합니다.

경제·정치 투쟁 시너지가 불발한 박근혜 퇴진 운동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철도 파업 중단이 결정적



운동의 견인차 구실 했던 철도 파업



탄핵 이후 노동자 파업 확산 우려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봤듯이,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연결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구체적인 정치 상황과 계급세력 균형에 따라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가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과 개혁주의 정당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은 이런 불균등성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승해, 흔히 자기제한적으로 투쟁에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1996년 12월~1997년 1월에 벌어진 민주노총 파업에서도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해 파업했습니다. 기층 조합원들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업을 명령해 최대 38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엄격히 통제하다 파업이 확

대일로를 걷던 와중에 돌연 “수요일 파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 등 경제 위기가 엄습해 오고, 정치 파업의 영향으로 경제 파업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파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뒤늦은 총파업을 명령했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대중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을 거슬러 전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료층과 개혁주의 정당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대중 파업이 자동으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연결 및 기존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혁명적 조직의 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14~15면에 실린 ‘혁명적 당에 관한 다섯 가지 물음’을 보시오.)

한국에서도 지난 4반세기 동안 노동조합 관료층의 영향력 하에서 룩셈부르크가 묘사한 것과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파업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분리, 부문주의가 점차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정학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려면,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런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이 경제 투쟁 참가자들을 정치 투쟁에도 참가케 하고 그 반대 방향도 성사시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화물 파업 지지는 그 운동이 정치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나. 이게 우리에게서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시키는 합의를 하는 바람에, 국정조사는 여태 첫발도 못 떤 채 있다. 그렇게 김을 빼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며, 윤석열 퇴진 촛불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 대응을 했다.

역대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이는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정조사 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돼 처음 실시된 것은 1988년이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로,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노태우의 민정당이 참패했다. 그러자 노태우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협조를 구했고, 3김이 이에 ‘5공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첫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예컨대 5.18 광주항쟁 진상조사에선 학살자들을 청문회 자리에 세운 것은 전진이었지만, 그 뿐이었다. 나중에 ‘유행어’가 될 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남았다. 엉뚱하게 전두환이 아니라 최규하가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됐지만 그나마 무혐의 처분됐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직접적으로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양보를 받아 내 시작



윤석열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고 이지한 씨 아버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당시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계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기관 보고에 임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깊은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호통치다 끝나요. 그걸 보면서 특별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통치다 끝나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도 돌아볼 만하다.

당시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자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병원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달려와

집회를 여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시간을 끌고 김을 빼려고 했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홍준표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워 공공병원을 닫으려 했다는 것이 명백했는데도 말이다.

운동의 압력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론 났다. 그러나 ‘불건전한 적자’가 있음을 공식화하는 독소 조항들도 포함됐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의 대책을 내놔다. 홍준표는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국정조사보다는 당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고, 이는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런 투쟁들이 쌓여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해 정권 퇴진 촛불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와중에도 국정조사 카드는 거리 투쟁의 힘을 헌정 질서 안으로 제한하기 위해 등장했다. 2016년 11월 12일 처음으로 100만 명이 모여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한 직후 추진된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즉각 퇴진 요구와 상충하는 것이었다.

그 청문회에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은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낸 것이 맹탕으로 끝난 청문회의 몇 안 되는 ‘성과’였다.

그나마도 거대한 촛불 덕분이었다. 국정조사 기간이었던 12월 3일 촛불 집회에 무려 232만 명이 참가해 정점을 이뤘고, 그 직후인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됐다.

요컨대 국정조사는 말다툼으로 끝나기 일쑤다. 미약한 성과라도 낸 경우는 거대한 대중 운동이 있고 국회가 아니라 대중 투쟁에 주도력이 있을 때였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정조사보다 거리 운동에 분명한 강조점을 뒤탈다.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고금리·고환율 탓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건설 기업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니,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3퍼센트가 1년 이내에 금융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흔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를 높여 달러를 빌린 나라와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게 한다. 이는 신흥국과 빈국들의 외환위기를 낳을 수 있다. 달러 가치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압력도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화가 유출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삶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금리가 7퍼센트로 오르면 무려 190만 명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퍼센트를 넘어섰다.

외환위기를 막겠다며 추진하는 금리 인상 탓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이미 외환위기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 탓에 금융권의 자금 부족이 심해져 심각한 금융 위기가 닥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환·부채 위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는 훨씬 더 심각한 고통전가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그리스에서는 부채 위기를 이유로 극심한 긴축이 강요됐고, 이 때문에 임금은 40퍼센트가량 줄고 연금과 복지는 무려 70퍼센트가 삭감됐다.



이윤을 최우선하는 정부 자신의 선택은 서민 생계비 위기뿐 아니라 금융 위기의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화물 노동자들

그러나 이와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임금과 복지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이윤을 공격하면 외화 등 자본 유출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기업과 외국 자본들이 이윤을 위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 자본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본 통제 그 자체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개선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극심한 위기가 벌어지면 몇몇 정부들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자본 통제는 극심한 긴축 정책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위해 자본 통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업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돈을 쓰라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자본을 통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물가 억제?

또 정부는 물가 인상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낳아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윤이 타격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성장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고 밝혀 왔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임금-물가 악순환’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임금 공격에 힘을 실어 왔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라는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며 물가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생필품 가격 인상을 규제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생필품과 공공서비스 가격 안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조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올해 10월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3.1퍼센트나 올랐다. 기업들은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이윤을 지켰고, 그만큼 물가도 올랐다.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기업 이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자칫하면 심각한 금융 위기를 부를 위험

한 도박인데도 말이다.

거품 키워 온 건 누구?

이제까지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우선하며 부동산 거품을 키워 온 것이 현재 금융 위기 우려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 하나이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 부채들이 부실화될 위험도 커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등 세금 감면,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를 다시 포함시키는 등 임대 사업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거품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더 큰 위기의 싹을 키우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다. 이런 체제를 수호하며 기업주들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식적인 정책이 노동자 등 서민층을 심각한 생계비 위기로 내몰고,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 위기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은 한국의 기업주들과 정부 권력자들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득을 보던 자들이 그 책임도 져야 한다.

정선영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임준형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 지방선거에만 투표권을 준다. 선거에 입후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마저 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12월 6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외국인 영주권자가 특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 시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해 투표권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투표권 축소만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해야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권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뒤집어 말해,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은 국적이나 민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상인 것이다.

민의

법무장관 한동훈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우선, 경찰 끄나풀 출신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하고,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 사찰과 감시로 항의를 억누르려 한 윤석열 정부가 ‘민의 왜곡’ 운운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 집권 세력은 노동자 등 서민층과 차별받는 사람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한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민심이란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과 민주적 의사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또 외국인의 투표가 ‘민의’를 왜곡한다는 주장은 엄청난 과장이다. 전체 유권자 중 이주민 유권자 수는 약 0.3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외



이주민 참정권 축소 시도는 이주민을 기계 취급하는 것이다

국인 영주권자 투표율은 13.5퍼센트였다. 잘 모르기도 하고 자신들을 위한 선거라고 여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왜 이주민의 의견은 ‘민의’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단기간 머물다 귀국하는 이주민도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런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 이주노동자 유입이 줄자 곳곳에서 일손이 부족해 난리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예컨대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만 명당 사망률은 우리 나라 전체 노동자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주민은 이렇게 힘겹게 일하며 한국에 적지 않은 세금도 낸다. 이주노동자가 2018년에 낸 소득세만 1조 원이 넘었다. 2018년에 이주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총 26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40퍼센트가 국내 소비에 쓰였다. 간접세도 상당히 낸 것이다.

또 이주민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법과 제도, 선출된 정치인들이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이주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평범한 한국인들에게도 이득이다. 예컨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아 저임금 노동자층을 이루면, 내

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진다면 이런 압력이 줄어든다.

상호주의

한편, 한동훈이 외국인 투표권 축소의 근거로 든 상호주의란 자국민이 외국에서 법률상·조약상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같은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일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이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혹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 출신 이주민이라고 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해야 할까? 만약 그런 이유로 이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상호주의의 채택은 가장 배타적인 외국의 선례가 확산되는 경로가 될 뿐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일정하게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주민 문제를 점차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동시에 정부는 그렇게 늘어날 이주민들을 사용자와 국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는 다양한 조치도 갖춰 놓으려고 한다. 인종차별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 축소도 그 일환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선거권을 비롯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더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국인이라서 문제?

보수 언론들은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약 12만 명 중 80퍼센트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점도 부각한다.

한동훈과 법무부가 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김은혜 등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이용하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 왔다.

그런데 투표권이 있는 중국인의 다수는 조선족(중국 동포)일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 중 조선족은 10만 6000여 명으로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보다 3배나 많다.

게다가 이들을 대거 유입시킨 건 한국 정부다. 한국 정부는 2010년대를 지나면서 다른 나라 출신 이주민과 달리 조선족에 대한 이주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 유입 즉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노동력으로써 유용했기 때문이다.

필요할 땐 ‘우리 민족’이고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면 ‘중국인’이라는 것인가?

소비니즘

우파들이 이런 모순을 감추고 모두 싸잡아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중국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친미·반중을 기조로 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간접 이용하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또 국수주의 선동으로 우파층을 결집시키고 대중의 시선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소비니즘 언사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투쟁 취재 영상
- 앞시즘 강연 음원

총 470여 개 콘텐츠



채널 바로가기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444호 등록번호: 서울대09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

5 1

혁명적 당에 관한 다섯 가지 물음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인 찰리 김버가 최근 영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는 가운데 피켓 라인(대체 인력 저지선)과 여러 토론 모임에서 혁명적 당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물음을 살펴봤다. 이는 <노동자 연대>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문답일 것이다.

백 년 전이면 모를까 혁명적 당 이 지금도 필요할까?

변화를 쟁취하려는 거대한 운동들이 몇 개월이나 수년 안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운동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거대한 규모의 운동조차도 의식적인 정치 조직이 없다면 패배하거나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무자비한 지배계급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와 특권을 보호하려고 경제적 압력과 탄압,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조직돼야 한다. 근래에 수단·스리랑카·미얀마에서 일어난, 변화를 쟁취하려는 영웅적인 투쟁들을 보라. 이 투쟁들은 결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지 않았다. 수단에서는 수감과 고문,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에도 불구하고 일 년 내내 시위대가 거리에 나서고 또 나섰다.

혁명이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세 종류의 집단이 나타난다. 첫째, 모든 변화를 중단시키고 기

존 질서를 지키려는 자들이다. 둘째, 개혁을 바라지만 경제와 정치 질서 전반을 뒤집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도자나 정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에게서 공장과 사무실, 자원, 부를 빼앗아 오려고 노력하는 혁명가들이 있다. 이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훨씬 더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 대신 해방을 쟁취해 줄 수 없다. 침략군, 폭탄을 투척하는 소수 의인들의 집단, 노동조합 지도자, 의회 정치인 그 어느 누구도 말이다.

그러나 혁명가들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파나 개혁주의적 사상이 득세할 수 있고, 이는 후퇴와 유혈낭자한 반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1년 이집트 노동자와 빈민들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내고 사회 혁명의 가

능성을 보여 주며 지배자들을 떨게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혁명가의 수는 충분하지 않았고 다른 세력들이 득세하게 됐다. 그래서 잔인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현 독재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다. 오늘날 똑같은 정치적 대결이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개인으로서 행동에 나서고 다양한 운동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운동의 일부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인종차별, 환경 파괴,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파업을 지지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행동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거나 다양한 단결된 운동에 동참한다. 그러나 우리가 맞서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자본주의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체제를 겨냥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을 위해서 투쟁하고, 인종차별, 기후 위기, 여성·성소수자 차별에 맞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맞서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낳는 근원과 대결해야 한다.

“상호부조” 네트워크나 무료 급식소에 힘을 쏟는다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 15면으로 이어짐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연결짓는 데에 혁명적 조직의 구실은 결정적이다

▶ 14면에서 이어짐

의 사람들도 알듯이 그런 일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활동들은 애초에 그런 활동을 필요하게 한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조직과 전략이 필요하다.

운동이 효과적이려면 우리에게 더 나아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우리의 상상력에 제한을 걸려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통일된 행동을 중심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즉,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혁명적 당은 일터와 거주지, 사회운동 등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혁명적 당은 핵심적 문제에서 구성원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느슨한 선거연합이 아니라 투사들의 당이다. 혁명적 당은 사회 내의 모든 견해를(심지어는 노동계급 내의 모든 견해도) 고스란히 반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혁명적 당은 어떠한 압력에도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정치를 방어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킨다.

그렇다고 현실의 투쟁에서 동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혁명가들은 모든 영역의 저항에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연결시키고, 이를 어떻게 이룰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노동자당은 당 내에서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파업 파괴자들을 용인하지 않는다. 영국 노동당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은 범죄 시되지만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혁명적 당이 투쟁에 초점을 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혁명가들은 일터와 거리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의회와 선거보다 우선시한다. 역사를 보면, 영국노총이 대중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880년대 성냥 공장 여성 노동자의 파업과 항만 노동자 파업 덕분이었지, 노동당 덕분이 아니었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와 그 직후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불을 붙인 건 이미 의회를 통한 개혁 운동에 염증을 느끼고 러시아 혁명에 기대를 걸었던 활동가들이었다. [1930년대에] 파시스트인



혁명적 정당은, 운동에서 벌어지는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쟁투에서 경험과 논쟁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조직이다

오스월드 모즐리(영국파시스트연합 총재)를 패배시킨 것도 노동당이 아니라 혁명가들과 급진적 유대인 단체들의 행동이었다.

노동당은 1970년대에 일어난 대중 파업에서 당시 주변적인 구실을 했다. 1970년대 말에 일어난 파업들은 아예 노동당 정부에 맞선 것이었다. 노동당 지도부는 1984~1985년 광원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2001년에 시작된 거대한 반전 운동은 노동당 소속 블레이 총리의 거짓말과 유혈낭자한 미국의 전쟁 노력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협조 에 맞선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의 원동력이다. 그 어떤 수많은 선거운동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만큼이나 체계적 인종 차별을 쟁점화하고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 어떠한 지배자와 정치인들의 회의도 학생의 동맹 휴업과 멸종 반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회담장 바깥에서 벌어진 거대한 거리 시위만큼이나 기후 위기 문제를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대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과 파업이 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킬 희망을 준다. 때로는 혁명가도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행동이 지배적이고 무엇이 무엇에 종속되느냐이다. 따라서 폴란드 출신의 위대한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1900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권력 장악과 사회혁명 대신에 그것과 대비시켜 개혁 입법이라는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통의 목표로 향하는 더 평온하고 느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이 아니라, 낡은 질서의 피상적인 수정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 당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다.

정치는 파업과 같은 노동계급 투쟁을 분열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보수 우파와 기업주에 맞서는 투쟁에서 단결하려 한다. 그러려면 정치적 이견이 있을 때도 같은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피켓 라인에서 키어 스타메(현 노동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를 혐오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거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로 피켓 라인을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투쟁이 정점에 있을 때도 말이다.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차별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썩어빠진 관념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지, 그것에 반대하며 논쟁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다.

때로는 이런 논쟁들을 제기하는 것이 끌려올 수 있다. 후진적인 말을 듣고 못 들은 체하는 것이 언제나 더 쉽다. 혁명적 당의 일부가 되는 것의 장점 하나는 그런 조직이 이런 후진적인 주장에 맞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혁명적 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차별과 착취에 맞서는 투사가 될 것을 요구한다.

사태에 영향을 주기에는 혁명적 당의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가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다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이들과 견줘 봤을 때 우리가 2000~3000명뿐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혁명적 당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만만찮은 과제다. 하지만 혁명적 당은 전반적인 투쟁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것이다. 그리고 파업과 대중운동이 분출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운동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쟁투가 벌어진다.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사람들은 기존 체제 안에서의 변화를 먼저 추구한다.

우리는 경험과 논쟁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조직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수천 명 있으면 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조직을 건설하고, 일터 투쟁을 지지·고무하고, 자본주의에 맞서고, 사회주의 사회에 관한 주장을 펼 수 있다.

영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전국적인 운동(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운동)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영국에서 극우와 파시스트들의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노동조합 소속의 당원 활동가들은 더 많은 투쟁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다. 당면 문제들에 맞서면서도 언제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전투를 생각하는 당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19호 / 번역 강미령



이태원 참사

참사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의 책임 전가 위한 야비한 수작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곧 49일이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아깝다 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본지가 참사 초기부터 논증해 왔듯이,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윤석열의 잘못된 공권력 배치 우선순위가 낳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였다.

참사 당일 공권력 배치의 우선순위는 대중의 안전이 아니라,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한 감시(공안)와 마약 단속에 있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리라는 것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 (본지 440호의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보시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전가 위해 비열한 짓들을 하고 있다. 최근 유가족들이 폭로하고 MBC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일부 유가족에게 '마약 부검'을 권유했다. 또, 경찰이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에도 일괄 '마약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마약 부검'

이태원 참사가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또한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병력의 다수(80명)가 마약 단속에 투입됐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자신도 이태원 참사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인지했던 듯하다.

참사의 책임을 전가할 속죄양을 찾기 위한 악랄한 수작이자 지독하게 모욕적인 윤석열 정부와 검·경의 행태에 유가족들은 "우리 애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명분인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11월 22일 유가족 최초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울음 소리로 가득했다

기도 하다. 최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재벌 3세 마약 일당 검거'라는 '성과'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마약과의 전쟁'의 허구성과 문제점은 본지 441호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을 보시오.)

최근 새롭게 드러난 정부의 책임 회피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이 참사 직후 대책회의에서 "참사" 대신 "사고"라고, "피해자·희생자" 대신 "사망자·사상자"라고 쓰게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압사"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한 것이 밝혀졌다. 참사의 진상을 축소하려고 골몰하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유가족 통제

유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참사 직후 정부가 유가족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 정황도 속속 폭로됐다. 유가족이 문쳐 저항에 나설까 봐 사전 차단한 것이다.

정부는 장례식장에 공무원들을 보내 죽치고 앉아 있게 하거나, 장례 비용 얼마 쥐여 주며 사태를 하루빨리 끝내려 했다. 다른 유가족을 만나 보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도 거절했다. 그레 놓고 한 언론사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역겹게도 "2차 가해" 운운했다.

고 김이서 씨(가명)의 언니는 동생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에 매일 가서 다른 유골함의 날짜를 확인했다고 한

다. 10월 29일이나 30일이 적힌 유골함을 13개 찾아냈고, 그 주변에서 무작정 기다려서 다른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뉴스타파> 보도)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이다."(고 이민아 씨의 아버지)

꼬리 자르기 수사

그런데 이토록 뻔뻔한 참사 책임자들(대통령 윤석열, 행안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한동훈, 경찰청장 윤희근 등)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을 열토당 토않게 이태원 참사에 빗대며, 고물가·고유가 고통에 맞서 저항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진두지휘했다.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이 다 되도록, 보고서 삭제 의혹이라는 결과적 문제로 경찰관 2명이 구속됐을 뿐이다. 게다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더 줄었다. 반면, 경찰은 참사 직후 폭로된 민간 사찰 보고서의 유출자를 신속하게 색출하고 징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애초부터 꼬리 자르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유가족들은 "부실한 '셀프 수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 상황도 예상대로 시간 벌기로,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국정조사는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고 오히려 정부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기회만 주고 있다.

벌써 약속한 국정조사 일정(45일)의 3분의 1이 흘러갔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놓고 국민 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12월 1일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 면담에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오열해야 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봐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이 참사는 윤석열의 경찰력 오용 통치가 낳은 비극이자,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비극의 예고편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우리 삶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성지현

온라인 토론회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텐안먼 항쟁과 그 유산

일시 | 12월 14일 (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문가

참가신청

bit.ly/121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지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노동안례TV

노동안례TV